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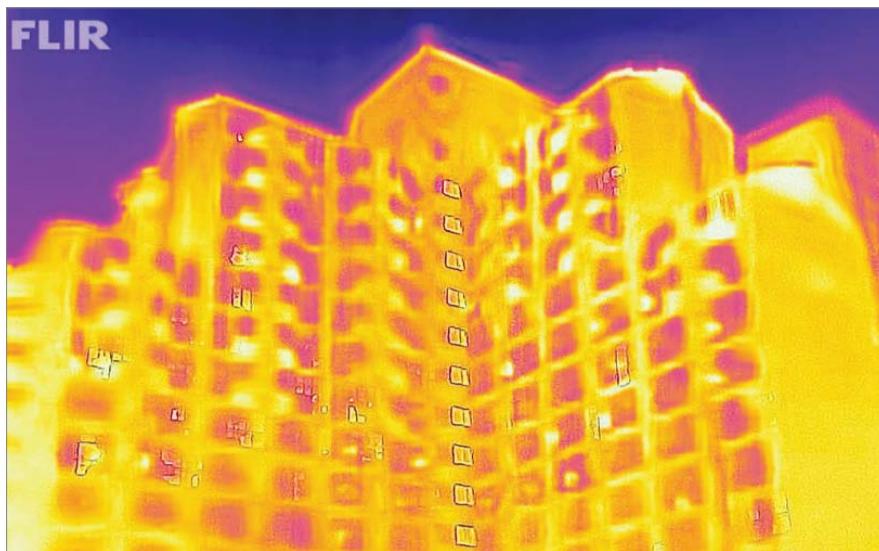
“전기료 폭탄 터진 후… 대책 나오려나” 뒷북정책 우려

7월분 요금 청구서 이번주 발송
정부, 누진제 한시 완화 등 검토

이번주부터 각 가구에 올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언제쯤 발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정부는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총리가 지시한



서울 낮 최고기온이 39.6도까지 오르는 등 서울지역 1111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 냉방을 한 집의 창에는 푸른색이 돌고, 열이 발생한 실외기는 밝은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

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이번 검토에서 제외했지만,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방안 중 국민이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전력수급이나 한전 실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 주면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여유롭게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폭염이 지난 간 뒤에 대책을 내놓아봤자 그동안 에어

컨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 국민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6일 3주 만에 마주 앉아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동은 이 총리의 해외 순방과 문 대통령의 휴가로 인해 3주 만에 열리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최저임금 등 경제 관련 논의와 함께 폭염과 관련된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3주가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집회에서 참가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급 불균형·규제 후유증, 집값불안 ‘뇌관’

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대책 부작용 우려 양질의 주택공급 등 제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 하반기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최근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상승폭이 둔화하고 주택거래량이 줄고 있다.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지난 2월 전기대비 0.20%에서 5월 -0.03%, 6월 -0.02%로 하락 전환했다. 주택 거래량도 3월 17만7000호에서 4월 13만6000호, 5월 13만8000호, 6월 13만6000호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잇따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하반기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출심사 시 신(DTI)을 주택담보대출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주담대에서 이자만 반영하는 기준 DTI에서 원금을 더한 원리금 합산으로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는 은행권에 원리금에 대출자의 모든 부채를 반영하는 종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지난달 상

<최근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이슈의 내용	영향
① 통화정책 방향·효과의 불확실성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초기 국면의 부동산시장 영향 불확실	통화정책 영향은 미약
② 실물경제의 침체 가능성	·경기 회복과 경기 침체의 논란 지속 ·경기 침체시 구매력 약화	경기 하강 시장타격
③ 가계부채의 임계치 근접	·가계부채 통계상 경제가 감내할 최대수준에 근접	유동성 제약 효과 존재 효과의 크기는 불확실
④ 시장의 공급과잉 우려	·시장의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지적 ·지역간 미분양 문제가 상이	가격하락 지역간 양극화
⑤ 새로운 대출규제 기준	·새로운 대출규제 도입이 시장 유동성을 제약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효과 예상	부동산 수요 위축 예상 단, 위축 정도 판단 유보

현대경제연구원

호금융권에도 입했고 오는 10월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출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형 연구원은 “수요 억제에 치우쳐 향후 수급불균형, 지역 간 양극화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택거래량 감소로 인한 부동산업 위축, 풍설효과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 등이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수요와 공급 균

형에 바탕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와 실거주자의 선호를 고려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교통 여건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총량적 공급 확대보다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규제완화 등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인위적 규제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화 등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기업들은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 분위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대중교통 ‘몰카’ 수시 점검 의무화

국토부, 법제화 추진

위반시 최대 5000만원 부과

여성들이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을 암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불법촬영)’ 수시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시설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는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증가하며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 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갖추고, 1일 1회 상시 몰카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지하철·철도는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몰카 정기점검을 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공항에서는

안내·경비인력을 대합실·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는 감시반으로 운영한다. 이동형 몰카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등이 몰카 범죄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점검 의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징계도 추진된다.

도시철도·철도운영자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해지까지도 고려된다.

공항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중교통시설의 화장실, 수유실 등에는 점검 실명제를 도입한다. 점검을 완료한 시설에는 인증제(클린존 마크 부착)를 확대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 장소에는 몰카 촬영 주의를 환기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를 병행한다.

박무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대중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시설이 몰카 범죄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

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조과세수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조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면

서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은 우리 모두의 생활 수준 및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라며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 국민합의 필요

» 1면 ‘조세부담률 첫 20%…’서 계속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